

그리고 일본군'위안부'범죄의 해결을 위해 모여진 힘과 경험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각종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성과

신 혜수 (정대협 국제협력위원장)

1990년 11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창립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한국여성운동의 공동과제로 삼아 운동을 벌여온 것이 현재 만 7년 5개월이 되었다. 1998년 4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국제세미나 '여성과 관광문화'에서 처음으로 '위안부'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때부터 계산하면 한 10년이 된다. 이제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운동을 돌아볼 때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역사의 뒤편길로 묻혀있던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역사의 정면으로 끌어내어 진상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정대협의 운동으로 생존자 할머니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공개적인 증언이 논문으로, 책으로, 연극으로, 영화로 만들어져 역사에 알려지게 되고, 각종 학술논문, 학위논문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상이 다 밝혀지려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위안부'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회복하는데 기여하였다.

공개적으로 국민과 언론앞에 나타나고 증언함으로써 경멸과 천대를 받던 존재로부터 인간으로 대접받는 존재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잊혀졌던 기억을 되살리는 아픔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간으로서 대우받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본다. 몇몇 생존자들은 그들의 아픈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개인의 고난을 승화시키고 대중의 의식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3. '위안부'제도, 전쟁중 강간과 성노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위안부'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 개인과 가족, 그리고 국가의 수치스런 일로서 덮어두어야 할 것이 아니고 폭력이고 인권유린으로서, 피해자는 우리가 따뜻하게 감싸야 할 대상이라는 것으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이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의 강연회, 생존할머니들을 위한 위로잔치, 일본대사관앞에서의 정기적인 수요시위, 나눔의 집 방문객에 대한 살아있는 역사교육, 계속적인 언론보도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4. 정부로 하여금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여 생존 '위안부'에 대한 생활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대협의 운동으로 1993년 5월 「일제하 '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생존자 1인당 일시지원금 500만원과 월 50만원의 생계비 지원, 의료혜택,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등이 주어지고 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등에서 지역에 따라 액수와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물질적인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다.

5. UN등 국제기구 및 국제인권단체의 공식조사와 보고서채택을 이끌어 냄으로써 전쟁중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1993년의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 국제법률가협회(ICJ)의 1994년 보고서, 1995년의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 1996년 UN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쿠마라스와미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군대 성노예 보고서,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로서, 이는 국제법 위반이고 이에 대해 공식사죄 및 책임자 처벌, 법적 배상을 해야한다는 국제적 기준을 확립하였다. 이는 전쟁중에 이루어지는 강간, 성노예등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 당연한 것,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설립내용에도 반영되고 있다.

6. 미국과 한국에서 일본 전범 입국금지 조치를 이루어내었다.

미국은 1996년 12월 법무성의 발표로, 한국은 1997년 11월 국회에서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본 전범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입국이 금지되는 일본 전범자중 '위안부'제도 관련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 아시아 피해국들과 일본의 연대형성을 통해 아시아지역 여성들간의 연대, 여성운동을 강화하였다.

1988년 '위안부'문제가 제기된 이후부터 일본의 여성운동과의 연대가 이루어졌고, 1992년 첫 아시아 연대회의를 한 이후부터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간에 연대활동이 모색되었다. 피해자와 여성운동과의 연대는 증언모임, 법적소송 지원활동, 재정적 지원활동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각국의 여성운동간의 연대도 매년의 아시아 연대회의를 통해, 또 각종 국제회의에서의 연대활동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운동의 강화에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운동은 국내, 아시아, 국제적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죄에 대한 처벌 및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인권증진에 기여하였다. 특히 전쟁중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의 극단적 형태로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실상을 알려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인류역사에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높였다.

한국인권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
	B12-1	

■ 일본발제

- ▶ 일시 : 4월 16일 (목) 오후 1:30 ~ 4:00
- ▶ 사회 : 다카하시 기쿠에
- ▶ 발제 :
 - 1) 김영희 (리드레스국제캠페인 / 전후보상실현시민기금)
: 제 5회 아시아연대회의의 보고
 - 2) 스즈끼 유우코 (「 여성.전쟁.인권 」 학회)
: 아시아연대운동의 성과와 과제(폐포)
 - 3) 니시노 후미고 (VAWW net Japan / 일본의 전쟁책임자포센터 / 전쟁피해조사회법을 실현하는 시민회의)
: 지금까지의 운동의 평가와 글후의 과제
 - 4) 마쓰이 야요리 (아시아여성자포센터)
: '여성의 인권'국제운동에서 본 '위안부'운동의 평가와 행동제안

제5회 아시아연대회의 보고

김 영희(리드레스국제캠페인/전후보상실현시민기금)

1. 보고에 임하며

1995년 7월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이 발족한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던 우리들의 투쟁은 국민기금의 철회, 반대투쟁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기금을 발족시킨 일본정부의 의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피해자와 강열하게 결합하여 각국에서 연대하는 시민운동을 분열 고립시켜서 전체운동을 좁히고 침묵시키려는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되고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전후책임, 전후보상요구운동을 일본국내나 국제적 여론에서 돌출하여 나타난 ‘위안부’문제로부터 종식시키고 전체적인 전후보상의 요구도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보상을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누계 40조엔이라고 하는 일본인 군인이나 유족에 대한 은급이나 연금지급도 보상은 아니고 천황의 군대에게 충성을 맹세하여 싸웠던 것에 대한 포상이며, 대만의 전(前)일본군병사나 사하린 이산가족, 한국의 피폭자에 대한 지원도 인도적 조치의 틀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일단 보상을 시작하면 ‘위안부’문제 이외의 전후보상문제까지 무한히 확산될 것이며 이것은 전후 일본이 구축해 온 외교체제의 개편에까지 연계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일본정부는 ‘조약상으로도 외교상으로도 보상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논리를 유포하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물밑작업으로 얻어낸 양해사항으로 보상은 하지않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해 왔습니다. 나아가서 피해자가 고령임으로 ‘차선책으로 부득이하다’며 그럴듯한 이유를 달고 베이징여성대회나 유엔인권위원회, ILO등 국제무대에서 일본정부가 최선의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는듯이 선전공작을 하여 안팎으로 지지를 얻으려고 해왔습니다.

뒤집으면, 우리들의 투쟁은 1) 일본정부로부터 전례가 없는 보상을 실현시켜야 하고, 2) 과거에 체결한 조약의 해석이나 재해석율을 요구하며 피해국정부를 움직이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3) ‘국민기금’수령문제를 안고나가면서도 고령의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이 되도록 해야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지만 수많은 곤란을 안았던 운동이었습니다.

‘국민기금’ 발족당시, ‘아사히’나 ‘마이니찌’등의 신문사설이 ‘국민기금’을 성공시키느냐 아니냐 여부는 일본의 국익문제이니 꼭 성공시키자’라고 논조를 높인것처럼 ‘국민기금’과 일본정부는 주요매디아를 동원하고 매년 4억8천만엔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였고 선의의 국민까지 모금운동에 동원하여 문자그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국민기금’정책을 강행해 왔습니다.

현 운영심의위원장인 다카자기(高崎宗司)씨는 “일본정부에게 보상을 시킨다는 것은 혁명을 이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우리들의 투쟁은 돈도 권력도 없는 시민이 일본국가를 대상으로 정면에서 대결을 하지않을 수 없었던 곤란한 투쟁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과거 2년이상이나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싸워왔고 각국의 운동의 연대가 단절되는 일없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모여있는 것에, 그리고 이러한 연대회의의 테마가 말하듯이, 이제는 '국민기금'을 극복하고 일본정부를 향하여 공식사죄와 배상요구의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지평에 서게 된 것에 승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피해자 여러분, 각국의 관련단체, 지원단체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 '국민기금' 지급후의 공방

1) '국민기금'의 수법과 전개

'국민기금'의 수법은 각국의 운동상황에 파고들어서 피해자 사이, 피해자와 지원 관련단체 사이, 각국의 운동 사이의 연대를 각각 단절시키고 반목하게하고 해당정부나 국제여론에서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시금의 수령 대상자를 한국, 필리핀, 대만의 피해자 300명에 한정함으로써 인도네시아나 중국등지의 운동과 분단시켰고 강간당한 피해자도 제외하고, 나아가서는 3개국에 대해서도 해당정부나 행정부의 지원이 없어서 가난한 필리핀의 경제적 약점에 파고들어서 지급을 개시하는등 사사건건히 운동의 분열과 이간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국민기금'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 그 숫자를 달성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로부터 납득을 받아냈다는 면죄부를 얻는데 있었습니다. 일시금에는 수상의 편지와 일본정부로부터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첨가하여 3점센트로 하여, 일본국민의 선의도 있고, 일본정부가 국고로부터 돈도 거출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일본국 수상의 사과편지도 있지 않다가, 과거 미국이나 캐나다가 했던 보상과 어디가 다른가라고, 보상을 위장하여 피해자는 물론 선의의 일본국민이나 국제여론까지도 기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유희(레트릭)는 1월6일 한겨레신문등 한국신문 세군데에 기습적으로 게재했던 '국민기금'의 광고내용에 현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와 일체화한 '국민기금'방식을 일본국내에서는 민간의 선의의 '보상'운동이라고 강조하고 국제무대에서는 정부가 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는것과 같은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금'의 일시금 수령문제만에 사안을 왜소화하여 '국민기금'반대운동은 피해자들의 받는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캠페인까지 전개해 왔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일시금을 받은 한국 피해자들을 텔레비 화면에 등장시켜서 정대협이나 시민연대가 일시금을 받으려는 피해자를 차별하고 '이지메'를 하고있다는 이미지를 선전하여 가해측이 피해자측을 차단하는, '화해'나 '보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2) '국민기금' 반대운동의 전개

원래 '위안부'문제의 해결은 '국민기금'의 수령문제만에 왜소화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수령문제와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은 전혀 별도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운동은 '국민기금'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파제이며 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기 위한 장치라고 간파했고 '국민기금'에 대하여 각국이 일치하여 반대의 주장을 내걸었습니다.

'국민기금'반대운동은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기위한 과정의 운동이며 목적은 '국민기금'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서 일본정부에게 요구를 내밀기 위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국민기금'과 일본정부가 장치해 놓은 일시금 수령문제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대항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한 한국이나 대만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할애했을 뿐만아니라 또 하나의 시련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라고 하는 주장만으로 '일관해도 각국의 운동이 안고있는 상황은 다양하여 '국민기금'의 수령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지원자의 관계도 나라에 따라 다양하여 동일한 조직을 함께 만들고있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따로 따로 된 단체도 있습니다. 정부나 행정부에서 생활지원이 있는 한국이나 대만같은 경우도 있는가하면 지원은 일체 없을뿐만아니라 해당정부가 일본정부와 결탁하여 '국민기금'정책을 진행하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민기금'의 대상도 되어있지않고 일시금지급의 반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한국이나 대만과 점령하에 놓여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경과도 각기의 사회적 논조나 국민감정도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각국상황의 차이를 전제로 한 운동방침이나 전략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 존중하는 귀중한 경험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쌓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생활상의 다양한 사정으로 국민기금을 받은 필리핀의 피해자들이 하시모토 총리의 편지를 거부하여 반송하고 의료복지서비스에 주문을 다는 방법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선의와 정부로부터의 거출, 수상의 편지의 3가지가 세트로 주어져도 보상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일본정부에게 요구를 내걸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3월 한국.조선인 BC급전범보상재판결심에서 원고인 이학래씨는 "사죄와 보상은 일신동체의 것으로서 분리할 수 없다"고 '상징적 보상'을 주장했고 연합군 POW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BC재판에서는 1월6일의 '국민기금'광고를 우리가 공동으로 한겨레신문에 게재했던 반론광고를 증거로서 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피해자의 개인보상을 부인하고 '국민기금'과 고령자시설의 건설을 합의한 인도네시아정부에게 LBH와 피해자가 "'국민기금'에 반대하여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 달라"는 공개서한이나 요청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기금'에 대항하여 모금운동을 전개했던 대만이나 한국에서는 끈질기게 정부에 요청하여 민간모금에 정부가 플러스하여 '국민기금'과 거의 동액의 지원금의 입체를 결정하여, 받느냐 안받느냐하는,어려운 결단 앞에 서 있었던 피해자와 운동체가 겨우 '국민기금' 수령문제의 압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3. 현 시점에서의 '국민기금'의 평가와 운동의 종착점

이제는 '국민기금'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국민기금'측은 수령자의 숫자로는 체면이 서지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최근은 수령자 수와 내역을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공식 확인이지만 3월로 수령자수는 65명, 현재 아직도 80%가까운 피해자가 받기를 거부하고 숫자상으로도 '국민기금'이 파탄을 가져오고 있는것이 명백합니다.

발족당시, 우선 고령의 피해자에게 작은 '보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민기금'을 진행시키고 그것을 한 단계로하여 일본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아낸다고 주장하던 와다하루기(和田春樹)씨등도 최근에는 과거의 주장을 잊은듯 "수상의 사과편지는 위대한 성과였다"고 일본정부의 대변인으로 오인할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를 알기 시작

한 '국민기금' 모금협력자들은 "일본정부의 책임을 대신하기 위해서 모금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보상금'이라면 우리가 낸 돈을 도루 받겠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NGO에 기부하겠다"는 호소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운동을 분열시키는 '국민기금'의 수법은 피해자측에 상처를 주었고, 자기 정당화와 강압적으로 수령을 강요하는 자세는 피해자나 운동체 뿐만 아니라 피해국 정부의 반발도 샀습니다. 그 결과, 당초, '국민기금'이라도 발전적이라고 평가하고 과정을 바라보던 한국 김영삼대통령도, 유엔 쿠마라스와미 권고나 정대협외의 강력한 요구로 일본정부에게 "피해자와 운동이 납득하는 해결"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김대중정부가 탄생한 지금,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위안부'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한일조약의 재해석을 시사하면서 '인권'문제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부를 움직여서 다시금 외교문제화하는데까지 운동은 도달했습니다. '조약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해결은 끝났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당시 여당 3당이 '국민기금'정책에 합의했지만 외교적 문제가 생기면 다시 취급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3당합의의 근거가 무너진 지금, 일본정부가 '국민기금'정책을 재정리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일본변호사연합은 작년 7월에 대만의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에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에 개선이 보이지 않음으로 재삼 권고한다'고 하며, 금년 3월6일 하시모토총리에게 재삼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서는 '위안부'피해자에게 대한 가해행위는 국가와 군의 책임이며, "국민기금"의 '보상금' 교부는 법적 보상이 아니며 불충분하고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보상조치를 포함하는 입법해결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명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기금'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이 명백해지는 한편, 국제적인 정세는 우리들의 운동에게 유리하게 되어갔습니다. 작년만으로도 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일본정부는 ILO 29호조약에 위반한다고 두번째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미국에서는 '위안부' 관계자의 제2차입금금지조치를 결정, 미하원이나 화란의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상정되는등, 일본정부에 대해 전쟁책임을 져야한다는 추궁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가 '국민기금'으로 책임을 벗어나려고 급급하고 있는 도중에 95년 6월에는 오스트리아정부가 나치 피해자에 대한 개인보상을 결정, 96년 1월에는 나치피해국민 폴란드정부도 유대인학살에 가담했던 것을 사죄, 같은 해 12월에는 독일과 체코가 쌍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선언에 서명하여 '미래기금'을 창설, 스위스정부도 유대인유족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여 97년 1월에 '유대인기금'을 설립했습니다. 나아가서 금년 1월 독일정부는 동구권국가의 나치피해자에게도 보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후배상을 하는것은 이미 국제적 추세가 되었고 일본만이 이러한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는것이 아니겠습니까?

4. 전후보상실현시민기금, 리드레스국제캠페인 활동보고

제가 소속하고 있는 전후보상실현시민기금이나 리드레스국제캠페인도 미력이지만 각국의 운동에 보조를 맞추어서 활동해 왔습니다. 시민기금과 리드레스의 활동은 일본국내 운동의 작은 일부이지만 무릅쓰고 소개하는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보상실현시민기금은 '국민기금'이 발족하려는 전날에 발족되었습니다. '국민기금'

에 대항하여 시민모금을 받아낼 그릇을 만들어서 본래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등의 지원이 약한 나라들의 운동이나 피해자에게 생활, 의료지원을 했습니다. '국민기금'의 지급이 강행된 이후, 수령을 거부하며 투쟁하는 필리핀의 로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힘내라! 로라기금'을 시작했습니다.

'국민기금'을 차버리고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본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려고 일본 시민과 로라 약 80쌍이 파트너를 짜고 편지교환등의 교류를 지속하며 격려해 왔습니다. 작년 1월에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드레스국제캠페인은 작년 6월의 ILO총회를 향하여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공동으로 요청서를 냈습니다만,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더욱 각국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우리편으로 하며 일본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일을 목적으로 작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민기금'과 일본정부가 우리들 운동의 연대를 단절시키려고 한다면 거꾸로 연대를 강화하여 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의 해결은 이미 한 지역이나 국가의 운동이 개별적으로 일본정부에게 대응하는 것으로는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일본정부에 대한 추궁의 움직임과 연계하여 총체적인 힘으로 일본정부로부터 국가배상을 실현하는 일을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일본국내 활동으로서는 구체적으로는 1월6일 한국에 대한 '국민기금'광고계제에 즈음하여 항의성명을 냈고, 즉시 각국과 협력하여 반론광고를 내고 일본국내에 확산하는등, '국민기금'에 대한 비판, 반대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자민당을 포함한 정당들에게 요청서나, 무라야마(村山) 전수상이나 도이(土井)사민당당수에게 요청활동등, 국회의원을 향한 활동과 함께 하시모도수상의 편지를 거부한 필리핀의 로라들의 활동에 맞추어 외무성에 요청활동을 하기도 하고, 300회 '수요시위'를 맞아 재한일본대사에게 요청서를 보내는등, 일본정부에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연합에 ILO총회에서의 견해를 묻는 질문서를 내기도 하고, 자치노(自治勞)나 일교조(日教組)에게 요청서를 보내어 노동조합에게도 역할을 했습니다.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 주간 '금요일'에 의견광고를 게재했는데 광고를 본 한 독자의 움직임으로 뉴질랜드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공감메시지가 온적도 있습니다.

해외활동으로는 8월의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에 한국, 필리핀, 대만과 공동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12월8일에는 한국, 대만, 필리핀, 미국, 캐나다, 화란의 7개국 9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내는등 각국의 연대를 목적으로 일했습니다. 미국하원의 결의안 상정을 위한 활동에서는 리핀스키의원에게 지지메시지를 보내고 일본계 페루인의 보상요청운동과도 연대하여 미국의회를 움직일 일도 염두에 두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뉴욕 타임즈에 의견광고를 게재할 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미래를 향하여

국민기금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우리들의 운동은 지금까지 국민기금 수령문제에 할애되어왔던 에너지를 일본정부를 향해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결은 끝났다'라는 논리는 문어졌고 외교적으로도 '국민기금'정책은 힘이 없어졌습니다. 피해국정부의 이해와 협력을 보다 더 얻어가면서 이러한 흐름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각국의 운동의 연대가 우리들에

게 강점이 됩니다. 각국 사이의 운동을 이해라고 존중하면서 격려하며 보다 더 한층 연대를 강화해 나갑시다.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보상실현의 흐름을 타면서 일본정부에 대한 전쟁책임 추구의 움직임과 연동하며 일본정부를 움직여 나갑시다. 일본국내에서도 입법화를 향하여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안은 제출되었고 일본정부가 도망갈 출구도 막아놨습니다. 그동안 근로정신대, 731부대, 강제연행, 강제노동, 세균전피해자등의 재판도 제기되었고 나아가서 일본정부에 대한 추궁은 강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후보상운동과도 결합하여 일본정부의 결단의 시기를 앞당깁시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던 강덕경할머니나 김학순할머니, '국민기금'을 받은 피해자들조차도 첫째되는 염원은 일본정부로부터의 성의있는 사죄와 배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돌아가셨지만 유지를 따라서 하루라도 속히 일본정부로부터 해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미력이나마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시아연대운동의 성과와 과제(메모)

스즈키 유우코(鈴木裕子)
([여성.전쟁.인권] 학회)

1. 들어가는 말

제1회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이하 아시아연대회의)가 서울에서 열린지 벌써 5년8개월, 일본정부에 의한 '민간기금'='국민기금'공세와의 치열했던 투쟁을 지나 지금 아시아연대운동은 공통의 목표 아래 새롭게 큰 한발자욱을 내디디려고 하고있습니다.

'위안부'(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금전'문제로 왜곡하고 책동에 책동을 더해오던 '국민기금'정책의 파탄은 이제 명백합니다.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은 깨끗이 패배선언을 하고 철수해야 합니다. '자선은 필요없다, 명예회복을 하라'는 피해여성의 피맺힌 외침을 짓밟고 상호간에 분단, 기열, 갈등, 불신을 심는 일에 부심하며 광분했던 책임을 지고 일본정부는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거의 4년이 되어가는 '국민기금'에 대한 피해여성과 지원단체, 지원자들의 끈질긴 투쟁은 작년(1997년) 대만정부에 이어서 한국정부도 드디어 움직여서, 김대중 새정권에 의한 정책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김영삼정권의 "죄를 범한 일본이 자기의 책임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해야 한다", "(김영삼대통령의)보상은 필요없다,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하라"는 발언의 진의는 도덕적으로 높은 입장에서 서서 일본정부의 실천을 촉구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정부에게 일레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자세는 결과적으로 일본정부의 '개인배상을 하지않겠다'는 논리에 이용되었고 돕는 일이 되었습니다(제3회 아시아연대회의에서의 양영지씨의 보고참고).

김대중정권은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인권문제로서 명확히 인식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상조치가 당연"(주 1)하다는 자세를 공식적으로 표명했고, 이 문제에 대한 자세전환을 선명하게 내걸었고('마이니썬신문' 1998년3월19일자 조간 1면 7면참조), 일본정부에 의한 배상실현시까지 입체를 할 의향을 내비친 연유입니다.(역자 주- 이 원고가 도착한 다음날, 3월28일에 정부의 차관회의에서는 155명의 할머니들에게 정부의 지원금 49억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일본정부의 배상을 받으면 이를 국고에 환수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일간신문들에 보도되었다).

한일조약 협정을 방패로 완강하게 개인배상을 거부해 오던 일본정부에게 있어서 이것은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배상은 하지않음을 전제로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서 고안되어 강행되었던 '국민기금'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여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피해자나 지원단체가 일관하여 주장하는 법적책임의 이행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2. '위안부'문제가 조명해내는 아시아의 가부장제 - 제1회아시아연대회의

여기서 아시아연대회의에 즈음하여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제1회연대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은 1992년8월10-11일로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이 주최하고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홍콩, 일본의 6개국에서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재일한국인여성그룹을 포함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행동네트워크'와 '매매
춘문제와 연대하는 회의' 멤버 약 30명이 참가했습니다.

제1회 연대회의에서 제가 특히 인상을 받았던 것은 '위안부'문제는 회의에 참가한 아
시아여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서 선명하게 인식되어 있었다
는 점입니다. 이 배후에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일본의 경제침략과 그것과 한짝이 되어 행
해지고 있는 아시아여성에 대한 '성침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화, 경제침략, 식민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여전히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가부
장제 아래, 여성의 권리는 박탈되고 여성에 대한 성억압, 성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
있으며 '과거의 문제'(위안부문제)에 비추어서 '성폭력'이 지금 문제되어야 한다는 필리핀
대표의 지적이 새삼 가슴에 강하게 울려옵니다.

태국에 살면서 태국의 인권문제를 취급하던 인도여성의 발언도 저의 마음에 깊이 남
았습니다. 그녀는 성폭력을 낳고있는 토양으로서 '부권적 사회상황'을 지적한 후, 지금 태
국의 마을 마을에서 이러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군사
화, 식민지화, 자본화 속에서 여성은 물건화되어가고 있다. 마을에서 젊은 여성들은 군대
를 위해서 차출되고 촌장이 선두에 서서 여성들을 모으고 매춘가에 판다. 마을은 그 여
성들의 수입으로 지탱된다"라고.

여성들의 성을 토대로 하여 '국가'나 '사회'의 '번영'을 구축해 가려는 사상이나 장치
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것들을 남성들의 정치와 가
부장제가 든든히 바쳐주고 있다는 것도.... 제1회 아시아연대회의는 아시아의 이러한 성착
취와 '남권. 가부장제사회'의 장치를 선명하게 드러다 볼 수 있게 했던것 같습니다.

제1회 아시아연대회의는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과거의 청산'에 그치지않고 바로 '성
폭력의 극치이며, 원점적 문제임을 강하게 각인했던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3. '책임자처벌'이 제기되다 - 제2회 아시아연대회의

제2회 아시아연대회의는 1993년 10월 21-22일 일본에서 한국, 북조선(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의 7개국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회의
에서 주목할 것은 '책임자처벌'이 한국정대협으로부터 제기되어 결의문에 들어갔던 일입
니다. 정대협이 '책임자처벌'을 제기한 배경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을것입
니다.

일본정부의 '보상을 대신하는 조치'라는 것은 말하자면 '보상은 하지않는다'는 말로서
또한 보상할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인정하지않고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한 반대와 항의의 의사표명과 행동제기가 책임자처벌이었다고 생각됩니
다. 이것에 대해 우리 일본측은 너무나도 반응이 둔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책임자처
벌은 이 운동을 하고있는 시민단체 안에서도 처음에는 이제와서 왜 책임자처벌인가, 지
금 그런 말을 하면 나서는 증인이 없어지지 않는가 라는 반대소리가 우세했습니다.

'위안부'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전부 책임자가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고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란, 당시 위안부제도를 기획 입안하고 이것을 집행하
도록 지시명령한 중요한 군인, '위안부'를 폭행 및 협박, 기만으로 모집 연행하는데 큰 역
할을 다한 지휘관과 민간업자들, 위안소를 관리운영한 부대 책임자들이라고 처음부터 주
장되어 왔습니다.(주 2). 병사에게까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국제적인 레벨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불처벌에 의한 배상책임'의 문제입니다. '위안부'범죄에는 당연히 처벌되어야 할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서 피해자의 인권은 미회복의 상태에 놓여져 왔습니다.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음으로서 권리가 미회복인 피해자에게는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이론으로서 이것이 불처벌에 의한 배상요구론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주목할 점은 정대협은 이 시점에서 일찍이 '위안부'문제가 '전쟁범죄'로서 보다는 '돈'의 문제로 바뀌치기 당할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제2회연대회의에서 한국측의 발제를 했던 이미경 정대협 총무(현재 국회의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책임자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적 책임은 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강조되어 책임자처벌은 거의 도외시되어 왔다. 그 결과, 강제종군위안부문제가 전쟁범죄로서의 성격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주는 '돈'의 문제로 바뀌치기 당하는 경향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책임자처벌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제기된다”(‘빼앗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2회 강제 ‘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보고“ 1994년3월1일, 6페이지).

이것은 세삼 중요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해 94년부터는 '돈'의 문제로 바뀌치기 하려는 '민간기금'구상이 나왔으니깐요. 한국측의 문제제기를 이때 조금 더 심각하게 대처했더라면, 싫어서 후회가 됩니다.

4. 책임자처벌과 '민간기금'구상

1994년5-6월, 전'위안부'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한 '민간기금'구상이 현재화되었습니다. 발기인은 시미즈스미코(清水澄子-당시 일본사회당(현사회민주당) 참의원의원), 우에노치즈코(上野千鶴子-도쿄대학 교수)등 8명의 여성이었습니다. 최근의 저서([민족주의와 gender]에서 우에노씨는 “나는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은근히 생존자의 생활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NGO로서 조직할 준비를 해왔다. 너무나도 많은 장애와 곤란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위의 책 224페이지. 방점은 인용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자체가 피해여성을 구제하기 위한 모금의 대상으로 내려다보고 국가범죄 고발자로서의 그녀들의 존재를 왜소화하는 언동의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국가적 성폭력, 조직적 성폭력, 전쟁범죄였던 '위안부'범죄의 본질을 은폐하고 금전문제로 왜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민기금'의 선도적 역할을 시미즈, 우에노등의 여성이 결과적으로 한 것으로 되었던 것은 같은 일본여성으로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책임자처벌을 쟁점에서 교묘하게 일탈시키고 '생활지원'을 주요한 쟁점으로 하는 징조는 이미 제2회 아시아연대회의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시미즈씨의 발언이 그것입니다.

“어제 보고에서 한국정대협의 이미경씨가 일본의 운동에 의견을 듣고싶다면서 던진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법적책임을 물을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강조되어서 책임자처벌은 거의 도외시되고 있다. 그 결과, 강제 '위안부'문제가 전쟁범죄로서의 성격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돈의 보상이라는 문제로 바뀌치기 당하는 경향이 있지않는가, 그러므로 금후 책임자처벌문제가 정말 가능한지 어떤지 토론을 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제기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한 일본의 상황안에서

어떻게 보다 많은 찬동자를 만들어 가는가라는 운동면에서, 이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략) 장기적인 문제와 당면문제를 부단히 양면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생활이 곤란한 '위안부'들의 생활을 어떻게 지원해 나가느냐 하는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후략) (위의 책, 52페이지. 방점은 인용자).

'장기적인 과제로서'라고 하는것은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일본에서는 (특히 정치가의 용어로는) "지금은 하지않는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책임자처벌'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으로서 '민간기금'구상이 부상하여 왔음에 세삼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민간기금'='국민기금' 반대로 강하게 결속 - 제3회, 제4회 아시아연대회의.

'민간기금'='국민기금'에는 일부 정부의 출자금에 의한 의료, 복지의 측면이 도중에서 부가되었읍니다만 이미 말했듯이 원래 개인배상은 하지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버렸읍니다. 나아가서 개인배상을 하지않는다는 것의 전제가 되어있는것은 '위안부'범죄는 국가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었읍니다. '위안부'범죄라는 것은 천황의 군대. 국가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군의 지도부 뿐만 아니라 내무 외무등의 각 부서,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그밖의 정부기관이 총체적으로 행한 국가적 조직적 범죄, 성폭력입니다. 더 말하자면 이 '위안부'범죄 안에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민족차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민간기금' 구상이라는 것은 식민지배. 점령지배나 국가적 범죄성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읍니다.

자주 되풀이해서 미안합니다만, '민간기금'='국민기금'이라는 것은 '위안부'범죄는 원래 국가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배상, 보상할 일이 아니다, 다만 불상하니 일회적인 '일시금'(후에 보상금이라고 칭함)을 지급하자, 그러나 그것도 민간으로부터의 말하자면 '선의'로 '불상한 할머니'들에게 '자선'으로서 주자는 것이 그 본질인 것입니다.

제3회 아시아연대회의(서울 1995년2월27일-3월1일), 제4회 아시아연대회의(마닐라, 1996년 3월28일-29일)는 이상과 같은 계략을 기도하는 '국민기금'에 반대하여 예상되는 분단, 분할정책에 항거하며 강한 결속을 맹서한 것이었읍니다. 사실 악질비열한 행위가 피해자나 피해당사국의 지원단체에 연이어 가해졌읍니다.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자면 한이 없읍니다.

그러나 '일본국민'의 세금을 물처럼 사용한 그 공작은 그 부도덕성, 범죄성을 폭로당하여(주 3), 결국 실패로 돌아갔읍니다. '정의'가 '불의'에 이겼고 민중의 힘이 권력을 압도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싶습니다.

6. 우리들의 과제

마지막으로 세가지를 말하고 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남권, 가부장제사회 안에서 아직 사회적 제재(스티그마)를 두려워하여 '마음의 상처(트라우마)'가 치유되지않은 채, 방치당하고 있는 아시아의 많은 '위안부'범죄피해자(전쟁지역 강간의 피해자도 포함)의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그녀들이 국가범죄의 피해자로서 공적으로 인정받고 그 존엄이 회복되는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위안부'범죄를 삶과 성에 대한 범죄, 착취로서, 또한 일본제국주의, 천황제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사(史)로서, 정대협 공동대표 윤정옥선장의 말을 빌리면 그 사실을 어떻게 분명히 역사 안에서 정리하고 위치지어 가는가, 여성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세계 근현대사 안에 어떻게 남기고 가는가 하는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가 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전후 40수년간, '위안부'문제를 일본사회 내부에서 여성의 인권문제로서 쟁점화하지 못했던 사실을 묻는 일입니다. '책임자처벌'이 나왔을때, 주저할 뿐으로 재빠른 대응을 조직화하지 못했던 우리 일본인의 전쟁범죄, 전쟁책임 인식의 존재양식을 묻는 일입니다. 지면관계로 세부에 걸친 보고를 하지못하지만 이 점에 관한 논점만은 여기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1점은 침략과 가해의 인식을 결여시켜온 역사인식과 피해자의식에만 구애받은 전쟁관입니다(=역사인식, 전쟁관의 변혁).

제2점은,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의 결여입니다. 일본은 대만을 50년간, 조선반도를 사실상 40년간에 걸쳐 식민지 지배해 왔습니다만, 1952년에 체결한 일화평화조약,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보상도 하지않고 있습니다.(‘식민지지배, 점령지배의 청산’).

제3점은, 쇼와천황(昭和天皇-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이 면책된 사실입니다. 히로히토는 그 침략전쟁의 최고책임자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측과 일본지배층의 공동공작이라고 할 교묘한 공작으로 천황,천황제의 전쟁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본인의 전쟁책임인식을 아주 애매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이 전쟁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말하자면 상징적 존재로서 천황이 있습니다. '국민기금' 발기인의 한사람인 오오누마(大沼保昭)씨(도쿄대학교수)는 천황이든, 그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어린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똑 같이 전쟁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주4). 그러나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전쟁책임이라는 것은 전쟁책임을 제1의적 책임자, 즉 오늘날의 경우라면, 일본정부에게 분명한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을 지게하는것이 시민, 주권자로서의 책임입니다. 똑 같이 나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전쟁책임에 대한 무게나 성격이 다릅니다. 오오누마씨의 논리는 현대판 '일억총참회'(一億總懺悔)론이라고 할 성질의 것으로 비계급적, 비과학적입니다(=전쟁책임을 추궁, 책임자처벌)

제4점은, 섹슈어리티(性)의 문제입니다. '위안부'제도는 국가의 성폭력, 강간시스템인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여성해방주의자(Feminist),여성학연구자,여성사연구자들의 대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매춘'이나 섹슈얼 하라스멘트,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등 성폭력에 관심이 깊은 여성들조차도 그러한 경향이 보입니다. 요는 '위안부'제도, 범죄는 성차별에 더한 계급차별과 민족차별이 서로 얽히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차별, 계급차별, 민족차별의 구조적 해명).

이상의 과제를 위하여 우리 일본여성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지, 지금이야말로 사상과 실천이 시험대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 1] '마에니찌(毎日)신문' 1998년3월19일자 조간은 김대중신정권의 '위안부'문제에 임하는 자세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박정수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견요지에서).

“중군위안부문제

일본정부가 대국답게 솔직히 사죄하고 적절한 배상조치를 취했었다면 세계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새정권은 역사의 진실은 명백히 하고 인권문제로서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직접 대책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하는 입장이다. 한국정부가 요구한다기 보다는 일본정부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국민기금의 돈을 피해자가 받느냐 받지않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다.

[주 2] 이일에 관해서 이미경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책임자처벌에 대하여

문- 한국대표에게, '책임자처벌' 대상자의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론을 듣고 싶다.

답(이미경) 어제 말했던대로 우리는 이 문제가 전쟁범죄임을 분명히 하기위해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임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쟁의 희생자인 병사들의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천황에 대해서는 미묘한 문제이다. 우리 운동 안에서도 당연히 '천황을 처벌하라'는 소리도 있으며, 책임은 천황에게까지 미친다고 믿고있지만 방법론으로서 기술적으로는 곤란한 점이 있다. 금후 진상규명을 통하여 천황이 책임자다 라는 사실이 명백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책임자가 누구인가 하는점에 대해서는 금후 운동가와 연구자의 협력으로 명령계통을 명백히 함으로서 가능해질 것이다.

책임자처벌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미야자와(宮澤)정권은 지난 8월4일 일본국가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그것을 명백히 해야한다. 우리가 고발을 할 경우, 검찰이 이것을 받을지 여부는 미지수인데 고발함으로서 일본정부가 책임의 소재와 진상을 명백히 할 의무가 생긴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으로 누군가를 감옥에 넣는다는 것보다는,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국제법에서 볼 때 범죄인 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으로 '보상을 대체하는 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함을 호소하고싶다.(앞의 책 “빼앗긴 명예를 다시 찾기위해서” 55 페이지).

[주 3] 그 일단은 예를들면 태북시(台北市) 부녀구원사회복지사업기금회(婦援會) 집행장, 하벽진(河碧珍) “자선은 필요없다, 존엄을 달라 - 대만의 전쟁성노예생존자의 요구”나, 한국 정대협 김윤옥공동대표 “국민기금은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가”(용서하지말자 '국민기금' 긴급국제회의(1997년7월27일, 도교 학사회관)의 보고집에 수록, 또한 영어판도 있음)

[주 4] 오오누마(大沼保昭) “前 위안부에 대한 보상 네개의 기둥” (요미우리(讀賣)신문 1995년6월28일부 '논점' 게재).

지금까지의 운동의 평가와 금후의 과제

진상규명과 입법화의 관점에서의 검토

니시노 루미고(西野瑠美子)

(VAWW net Japan/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전쟁피해조사회법을 실현하는 시민회의)

1. 도쿄회의에서의 VAWW 논의를 축으로

작년11월 도쿄에서 개최되었던 “전쟁시, 무력분쟁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국제회의에서는 전쟁시, 무력분쟁하의 여성에 대한 폭력(VAWW=Violence Against Women in War)의 형태나 확대정의등이 검토되었고 베이징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에 명시된 [충분한 진상의 규명] [범죄자의 추구와 고소]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할 행동전략이 논의되었다.

논의에서 주목되었던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쟁범죄로서 역사에 기록되어 오지않았다는 것(피해,가해의 기록화의 부재와 추급), 소위 진상규명의 방치와 가해자의 불처벌이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국가나 비국가의 집단이 이르게 온 전쟁이나 내전등에서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는 거의 취급되는 일없이 오히려 범죄가 발생했던 일조차 부인되어 왔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문제로 간주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이유로서는 전쟁이란 본래적으로 부권주의적인 행위이며 강간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의 극단적 표현이며, 이러한 부권주의적인 이데올로기는 전쟁이 가지는, 다른 나라나 그 인민을 종속하에 두려는 침략주의적인 성질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전시, 무력분쟁하에 되풀이 되어 온 강간, 집단강간등의 성적(sexual and gender)폭력을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위안부]문제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요구해 온 운동의 방향과 일치되는 것이었다.

피해여성의 구제가 방치되고 불처벌을 허용해 왔던 것은, 거기에는 법의 침묵, 가해자의 침묵, 국가의 침묵, 공동체의 침묵이 있었기때문이다. 성폭력피해자 자신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은 남성사회의 뿌리깊은 순결이데올로기의 억압에 의한 것이며, 한편으로 가해자 측이 사실을 봉인하려는 압력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증언하려는 목격자에 대해서도 위압적이었다. [위안부]문제에서의 국가책임의 인지와 개인배상에 막아서는 벽은 진상규명의 불충분함에 기인하고 있다.(2,3에서 상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권리가 행사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나 기록화가 필요불가결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접근으로서 일본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모색되어 왔다(4에서 상술)

2. 사실인식을 둘러싼 공방

지금까지 [위안부]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은 국가에 의한 개인배상과 정의의 실현을 요구해 왔으나 일본 국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역행하여 국회의원이나 학

자, 문화인등의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위안부는 상행위이다] [강제연행은 하지않았다]라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역사인식과 [위안부]문제의 국가책임을 부인하는 자들과의 합류를 허용하고, 성차별 sexism과 민족차별을 노출시킨 민족주의에 매달려서, 극히 정치적인 움직임을 진행시키고 있다. 교과서에 대한 공격은 그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93년의 관방장관담화에서 강제연행이나 군관여의 사실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태도로 지도하려고 하지않는다.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공식사죄와 국가배상을 애매하게 해오는 자세가 이러한 국내의 '리비죤니스트'의 발언을 용인하고 있다.

금년도부터 사용하는 중학역사교과서에는 [중군위안부]가 기술되었으나 도쿄대학교수 후지오카노브가즈쓰 岡信勝)대표의 자유주의연구회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 및 거기에 찬동하는 보수진영은 기술을 삭제하라는 소리를 강화하며, 전국각지의 지방의회에서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내고있는 반동적인 운동을 계발해 왔다. 3월의회까지의 상황은 도도부현(都道府縣)의회 레벨에서는 30의회에서 삭제청원이 제출되었다. 그중에서 취하나 폐안등이 된 의회는 13, 계속심의가 10, 채택취지, 의견서채택이 된 곳은 7이라는 결과이다. 또한 시정촌(市町村)의회의 레벨에서 삭제청원이 제출된 의회는 339곳에 미친다. 그러나 취하나 부결등이 반수이상의 256의회, 계속심의는 44, 의견서채택이나 취지채택은 39라는 결과이며, 청원이나 진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국민기금으로 조급하게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진상규명이 철저히 되지않았던데에 원인이 있다. 문서자료의 조사뿐만 아니라 피해여성의 청취조사나 현지조사는 정부와 일본인이 사실인식을 명확히 하기위해서도 불가결, 불가피한 책임이다.

그러나 각지에서 삭제청원을 막아온 것은 끈질긴 시민운동의 성과이며, 특히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이 운동의 앞장을 서왔다.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발언에 대해서 96년 12월에 여성들은 재빨리 항의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97년3월에는 '역사는 지울 수 없다, 여성들은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집회를 열고, 그후에 '위안부네트워크'가 발족했다. 이러한 성명이나 행동은 전국각지의 여성들에 의하여 확산되었다. 또한 전술한 도쿄국제회의에서는 세계의 정보교환과 연대를 위한 '전시하 여성에 대한 폭력, 세계여성네트워크'(VAWWNET)가 생겼고, 일본에서도 'VAWW NET JAPAN'이 조직되었다. 이렇게 일본국내 각지에서 여성들의 운동이 고조되고 한편으로는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 각국의 운동의 연대가 세계의 여성운동의 연대로 확산되어 온 것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3. 진상규명의 구체적 과제

일본정부의 견해, 이미 2회의 조사로 진상규명은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조사는 입구에 선데 지나지 않는다. 아직 미해명인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는 남겨진 세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싶다.

첫째는, 젠더(gender)관점에 의한 역사의 재조명작업과 교과서기술을 풍부히 하기위한 노력이다. 예를들면 남경(南京)학살의 조사,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거기에 있었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조사는 거의 손도 대지않았다. 도쿄재판이나 BC급전범재판에서도 아시아부재의 결함이 지적되고 있고, 여성의 관점에 의한 역사의 재조명작업은 서둘러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서에 기술은 되어있으나 사실관계의 기술은 충분하다

고는 말할 수 없으며, 더하여 젠더의 관점은 약하다. 교과서기술을 포함하여 젊은 사람들
이나 후세에 어떻게 이런 문제를 계승시켜 갈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등의 제시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위안부]문제의 책임에 대하여 기업의 책임이 전적으로 누락된 점이다. 전술했듯
이 [위안부]문제의 사실관계나 국가책임을 부인하는 움직임 속에서 기업인은 마치 제3자
인 것처럼 무관계의 행태를 공공연히 했고 [위안부]문제의 부정론자와 같이 서있다. [위안
부]문제를 일본인의 기억에서 제거해 버리려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의 기업
인 찬동자는, 가시마(鹿島)건설, 오오바야시구미(大林組), 미즈비시(三菱)중공업,, 스미도모
(住友)금속, 토오시바(東芝), 후지쯔우(富士通),닛쇼이와이(日商岩井), 아지노모토(味元),
라이언, 일본 켄터키 후라이치킨, 데이진(帝人), 동방레이온,기노구니(紀之國)식품, 도쿄
(東京), 히가시니폰(東日本)하우스, 스미도모(住友)은행, 요고하마(橫濱)은행, 히로시마(廣
島)은행, 스미도모해상화재보험.....등등 50을 넘는 기업이 이름을 내고있다. 이중에서 히
가시닛폰하우스는 15억엔을 내어 도쿄재판에서 A급전범이 되어 처형된 도조히데기(東條
英機)를 찬미하는 영화를 제작하고 그 공개를 눈 앞에 두고있다. 또한 여기에는 가고시
마건설등 강제연행에 관여했던 기업이나 산업위안소를 만들고 있던 기업등의 이름도 있
어서, 바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역사의 부인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하에서 기업도 일본국나 아시아 각지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있었다. 1943년 노동과
학연구소에 의한 [반도노동자근로상황에 대한 조사보고]에는 규슈(九州)에서 홋카이도(北
海島)까지의 각지의 사업소(광산, 토건, 공장등등) 37개사의 조사보고가 정리되어 있다.
[성적 해결책으로서 반도명주옥(半島銘酒屋)을 지정]하고 건물을 무대여하여 조선인 여성
을 작부로 두고있었던 사실이나, 여성들의 점진은 탄광의무국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었던
일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40년에 육군성 정비국 전비(戰備)과장이 북해도탄광 기선(汽船)주식회사에 보
낸[모집관계 잡기](노무과)에는 후생시설로서 성적욕망을 고려하여 [조선인, 중국인 창부
의 유치]가 있다. 노무과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징집은 관현의 협력하에 행해졌다.
징집은 기업과 계약이 있었던 업자가 모은 경우, 관현의 협력에 의한 징집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규슈의 치구호오(筑豊)에는 후루가와미네(古河峰)광산, 호오슈(豊州)탄광등에
조선인[위안부]가 있었던 사업장이 적어도 10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어느 전탄
광노무계의 '여자정신대로서 데려왔다'고 하는 증언(요미우리신문 1992.2.21부)도 나오고
있다.

세째는 [위안부]제도에 대한 모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예를들면 [위안부]의
도항증명서를 발행하던 경찰관계 자료나 구탁무성(舊拓務省), 내무성이 가지고 있던 조선
총독부, 대만총독부관계 자료, 나아가서 업무일지, 종군일지나 외무성, 법무성의 BC급전
범관계자료, 후생성사회, 원호국 소장자료등은 거의가 공개되지않고 있다. 예를 들면 민
간조사에서는 싱가포르의 위안소와 거기에 있던 여성의 청취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것들은 정부의 인식에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관계국에 조사협력을 요청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 진상규명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입법화에 의한 진상규명과 앞으로의 운동

1996년6월13일,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조사회설치법](이하 모도오가(本岡)안)이 모도오가쇼지, 사사노사다고 양참의원의 발의로 참의원에 수리되었다. 26명의 찬동의원을 얻은 발의였으나 기한이 넘어서 심의가 안된채 폐안이 되었다. 그후에 [위안부]문제의 입법해결을 요구하는 회'가 발족했고 한국이나 대만의 국회의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일본으로 초청하여 원내집회등 정력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입법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도오가법안을 축으로 다나카코오(田中 甲)중의원의원이 [위안부]와 731부대, 강제연행을 포함한 [항구평화조사회 설치법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발의하는 직전까지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제출되지 못했다. 정치세력의 힘관계가 영향을 주었던 것은 시민운동의 반성을 가져왔다. 소위 시민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기때문이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될 것은 매스컴의 행태이다. 교과서논쟁이 분출했을때 매스컴은 모두가 [위안부]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유엔인권위원회의 움직임이나 세계여성회의의 움직임등은 물론, 입법요구운동에 대해서 매스컴은 거의 보도를 하지않는다. 매스컴대책은 여론환기를 위해서도 필요불가결이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대책이다. 지난 수년간, 시민과 연대하여 움직여 온 의원은 모도오카의원을 비롯하여 수명의 의원뿐이다. 많은 의원들은 표와 결부되는 행동에는 민감해도, 전후보상문제에는 비겁하거나 회피적이다. 진상규명이나 배상의 의사가 있는 의원은 결코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다. 의원을 적극적으로 움직여나가는 운동도 필요하다.

현재, 시민의 손으로 몇개의 입법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먼저 폐안의 실패를 보았던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설치법안]이 다수의 소개의원(紹介議員)을 모집하는데 성공하여, 여기에서 힘을 얻고 다시금 국회에 발의하기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는 '전쟁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조사회설치를 위한 법률'과 '[중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금지급을 위한 법률'의 조기제정에 대한 청원운동이며, 또 하나는 '전쟁피해조사회법'을 실현하는 시민회의의 청원운동이다. 두번째 법안과 세번째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회설치법의 내용은 '항구평화조사회법'을 기본으로 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현재 일본국내에서는 이들 입법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발언자가 관계하는 '전쟁조사회법'(가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하고싶다.

여기서 구상하는 공적조사회란, 1)국가의 예산과 기관을 사용하여 조사를 하고 2)아시아제국 및 관계 각국 정부기관의 협력도 얻으면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3)일본정부의 정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자료를 제출시켜서 피해와 가해의 전체상을 조사하고, 4)그 조사결과를 국가의 공적인 것으로 하고, 국민의 공유물로 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민간이 아니라 공적인 조사기관이 중요한 것은 조사결과가 일본의 공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기때문이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방의회나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역할하여, 초당파 국회의원의 찬성을 얻어 의원입법으로서 성립시키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도 우선 진상규명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번, 국회제출에 늦었던 것은 시민운동과의 연대가 잘 되지않았던 점에 있으며, 이번에는 같은 궤를 밟지말도록 전쟁피해조사회법제정을 요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함으로써 여론을 환기하고 입법을 시민의 소리로 국회에 내걸려고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일본 전국에 지국을 설치하여 각기 지역에서 지역독자적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3만명의 서명이 모였다. 나아가서 지방의회에서는 '전쟁피해조사회의 설치를 국가에게 요구하는 의견서' 채택운동이 시작되어 있으며, 후쿠오카(福岡)의 시민운동이 호기마치(方城町)의회에 '전쟁피해조사회의 설치를 국가에 요구하는 의회결의'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의된 쾌거를 얻은바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을 전국각지에서 확산할 예정이다. 나아가서 병행하여 전국각지의 시민양케트를 기초로 법안의 검토도 진행했다. 시민의 소리를 반영한 입법실현을 향하여, 다른 단체와도 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자료조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본국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국이나 구연합국에도 자료는 남아있을 것인데 그들 조사청에 대해서는 각국의 운동과의 연대 없이는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자료조사에서도 아시아의 연대하는 행동을 호소하고싶다.

5. 국민기금의 현 상황

지난 3월31일부 한 유명신문 조간에 국민기금이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년도말에 예산을 다 써버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민기금의 예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 특히 국가거출의 면에 대해서는 알기 힘든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기금관계 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하고싶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대한 정부거출은 두개의 경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총리부로부터 여성아시아평화우호활동이나 공보사업비보조금(홍보비용)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외무성으로부터 의료,복지사업비(당초 '유엔여성관계거출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계산된)의 지출이다. 물론 피해여성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상금' 200만엔은 일체 정부거출과 무관하다.

1997년 여기에 대한 외무성 예산은 1억9018만엔이었다. 그 내역은 의료, 복지사업비가 한국, 대만, 필리핀에 대해서 300명분의 계산으로 42200만엔. 나머지의 1억4700만엔은 인도네시아, 네델란드, 중국에 대한 것으로서 이중 3800만엔은 97년3월에 일본정부와 인도네시아정부 사이에서 고통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각서의 조인이 행해짐으로서, 첫해분으로서 송금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10년계획으로 합계 3억8000만엔을 예정하고 있고, 개인배상의 길을 굳게 닫고 있다.

나머지 1억900만엔은 중국과 네델란드에 대한 예산이었으나, 중국정부는 개인배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인도네시아형식이 모색되는것 같다. 또한 네델란드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직접 교섭을 하고있는것 같다.

한편, 금년도 예산인데, 총리부와 외무성의 합계로 약4억8000만엔이 편성되고 있다. 이중에 외무성예산은 약8067만8000엔이며, 이것만으로 보면 의료, 복지사업비는 작년도 보다 삭감되었으나, 이것은 현단계에서 미래가 확실치 않는 중국과 네델란드에 대한 예산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섭에 따라서는 보충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산측면에서 보아도 국내외에서 국가에 의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기금에 의한 해결을 강행할 자세를 견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론형성에 대해 한마디 하고싶다.

전술했듯이 일본에서는 [위안부]기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론형성을 하고있다. 그들은 두권의 교과서를 포함하여 7권의 출판물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중 하나에 교과서의 파이롯드판(版)이 있다. 내년 3월을 목표로 출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1만부의 예약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파이롯드판의 목적은 그들이 만드는 역사 교과서 ([위안부]를 한줄도 넣지않는것)를 각지의 교육위원회에 채택하도록 하기위해서 여론을 강하게 만드는데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이 가속화 해가는 일본은 비교적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한편 우리들의 운동에 효과적인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997년5월22일, 미국의 국회의원이 울브라이트국무장관 앞으로 제2차대전에서 [위안부]나 포로등에 관련한 자료를 외국의 연구자에게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 국가에서의 운동에서도 취해야 할 것이 아닐까?

시민은 입법화운동 뿐만 아니라 '나눔의집'의 상영운동이나 '할머니의 그림전시회', 집회, 합습회등, 다양한 모양으로 일본사회에서 운동을 해왔다. 앞으로는 아시아 각국의 연대는 물론, 세계여성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대해 가는가가 과제일 것이다.

금년은 유엔인권선언 50주년의 해이다. 세계의 연대운동을 만들어갈 최적의 해이다. 도교회의에서는 일본의 '위안부'문제 워킹그룹의 김부자씨가 [1 year 1 issue], 즉 여성들이 각기의 과제를 호소할 때에 여성들의 연대의 증거로서 1년에 하나의 캠페인을 세계공동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했다. 금년은 인권선언 50주년을 마지하여 '1 year 1 issue'로서 위안부문제해결의 대캠페인을 제기하여 회의에서 합의되었다. 이러한 연대, 협력을 이번의 아시아회에서 재삼 확인하고 앞으로의 유기적인 연대행동을 살려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제5회아시아연대회의의 개최, 준비에 힘써주신 한국의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린다. 이 회의가 앞으로의 운동의 효과적인 단계가 될 것을 바란다.

'여성의 인권' 국제운동에서 본 '위안부' 운동의 평가와 행동제안

마쓰이야요리(아시아여성자료센터)

- '위안부'에게 명예와 정의를! 지구적 캠페인 2000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일본군성노예제) 국제재판(법정)을 여성들의 손으로.'

1. 국경을 초월한 '위안부' 문제 4분의 1세기

1) 기생관광반대운동과 '위안부' 문제

위안부문제를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은 1973년 한국교회여성들 기생관광반대운동에 일본여성으로서 호응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여성들이 "한국여성들이 일본남성의 성의 노예로 되고 있다"라며 분노를 가지고 과거 일본군이 조선여성을 '여자정신대'로서 강제연행했던 만행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우리는 '기생관광에 반대하는 여자들의 회'를 결성하여 하네다공항에서 일본남성들에게 항의 비라를 살포했습니다. 비라에는 '수치를 알아라, 매춘 목적의 관광단!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많은 딸들을 중군위안부로 강제연행하고는, 같은 땅에 집단으로 돈을 가지고 여성들을 육보이러 가고 있다. 남편이나 애인, 형제나 동료들을 한국으로 매춘여행하러 보내지 말라'라고 썼습니다. 이 하네다공항의 데모에서는 경찰에 연행된 여성도 있었지만 권력은 두 나라의 여성의 연대의 싹을 잘라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중군위안부에 대해 학습했습니다만 당시에 운동을 만들지 못했던 것을 새삼스럽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독재정권하에서 여성들은 민주화투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이 문제를 다룰 여유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나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 태국, 하자이에 살고있는 할머니

'위안부' 문제는 그후에도 나의 마음 속에 있어서 아사히신문 싱가포르특파원시대의 1984년에 태국 남부 하자이에서 살고있던 노수복할머니를 인터뷰했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서울 중앙일보에 게재되었던 '원한의 일대기 - 나는 여자정신대였다'라는 연재 기사를 보고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기록되어 있던 지옥과 같은 노예생활과 40년의 타향살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쟁범죄행위를 반성도 하지않고있는 일본에서 온 나에게, 할머니는 실로 따뜻한 용서의 말을 주셨습니다. 모국어도 잊고 있는데 겨우 생각해낸 일본어 단어들로 "병사들 나뻐다. 이제는 죽었다. 한국사람, 일본사람, 태국사람, 중국사람, 친구"라고 중얼거리며, 기도하듯이 두 손을 모은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너리에 남아있습니다. 할머니에 대해서 아사히신문에 기사를 쓰고, 잡지나 책이나 강연등에서 기회가 되

는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삶의 태도, 인간상에 깊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후에도 '위안부'문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졌던 것도 그 할머니의 용서를 올바르게 받아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3) 윤정옥선생의 조사와 한국여성단체의 분기(憤起)

4년후인 1988년, '위안부'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내일한 윤정옥선생을 도쿄에서 만났고, "일본군에게 연행된 동년배의 같은 민족인 여성의 문제를 역사의 어둠속에 파묻어 두는 것은 그녀들을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청년퇴직후의 여생을 모두 이 문제에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열정에 감동받고 진심으로 협력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조사여행의 결과를 윤선생님이 1990년초에 할겨레신문에 자세하게 연재하셨고 '위안부'문제가 역사의 어둠속에서 밝혀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후, 한국의 여성운동단체가 '위안부'문제로 일본정부에게 6항목(진상규명, 공식사죄, 국가배상, 책임자처벌, 교과서에 기록, 기념사업)의 요구를 내걸고 이문제를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91년 여름, 김학순할머니가 처음으로 증언에 나서자 피해자들이 줄을 이어 반세기동안의 침묵을 깬습니다. 민주화운동 안에서 힘을 기르고 새로운 여성해방주의 사상을 가진 한국의 여성운동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소리를 낼 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4) 아시아 각국에 운동이 확산되다

이리하여 한국에서 시작이 된 운동은 다른 아시아의 피해국에 재빨리 확산되었습니다. 90년말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여성인신매매문제회의에서 한국대표가 '위안부'문제를 호소함으로써, 아시아각국의 여성들이 이 문제에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여성운동이 조직되었던 필리핀에서는 운동목표가 정해지고 92년에 마리아 로사 헨슨씨가 이름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92년가을에는 북조선의 수도 평양에서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심포지엄에 참가했던 한국, 일본의 여성들 앞에 할머니들이 모습을 나타내고 고통의 체험을 말했습니다. 한국여성들과 굳게 악수하는 광경은 민족분단을 초월한 남북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전해오던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남북의 '위안부'의 만남은 93년6월 비엔나에서의 세계인권대회에서도 재현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 법정'이라는 NGO집회에서 1000명의 참가자를 앞에 놓고 세계각국의 다양한 폭력의 피해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증언대에 선 김복동할머니의 비통한 체험담은 아시아의 '위안부'문제를 비로소 널리 세계에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위안부'문제 심포지엄도 열려서 김복동할머니와 나란히 앉았던 북조선의 위안부 장수월 할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증언하여, 통역하던 여성도 눈물을 닦은 정도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후리아 폴라스씨가 참가, 일본식민지배하의 한국과는 조금 다른 일본군 점령하의 '위안부'체험을 말해서 위안부문제의 폭과 다양성을 인상지었습니다. 국제연대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필리핀의 여성운동은 그 후에도 위안부문제를 국제화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5) 비엔나세계인권회의와 여성에 대한 폭력

이 비엔나세계인권회의가 채택한 '비엔나선언'에는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라는 국제적인 여성운동의 캠페인의 성과로서 '여성의 인권'이 명기되었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그 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력분쟁하의 여성의 인권침해에 '위안부'제도가 '성적노예제'로서 포함되었습니다. 국제인권문서에 비로서 이렇게 명쾌하게 기록된 것은 한국, 필리핀 그리고 일본등 각국에서의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운동과 그것을 배경으로 한 국제적인 캠페인의 성과였습니다.

비엔나회의에서 여성들이 획득한 또 하나의 구체적인 성과는 '유엔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의 임명이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초대인 보고관에 스리랑카여성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변호사가 임명되었는데, 활동적인 페미니스트로서 '위안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후에 중요한 권고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위안부'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는 가운데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네델란드에서도 피해여성들이 줄지어 나왔고 지원운동도 조직되었습니다. 그밖에도 마레이시아, 비루마, 캄보디아, 태평양제국, 영국등지에서도 '위안부'의 존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필리핀, 중국, 재일, 네델란드의 피해자로부터 일본정부를 상대로 6개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일본의 재판소에 제기되어 각기 재판에서 지원연대활동이 행해졌습니다.

6) '여성의 인권' 아시아법정에서 다른 성폭력문제와 관련짓다

어떠한 성폭력의 경우에도 피해여성은 침묵을 강요당해 왔지만 '위안부'들은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용기를 주어서 침묵을 깨는 힘이 되었습니다. 1994년 도쿄에서 필리핀과 일본의 여성단체 협력하에 개최된 '여성의 인권 아시아법정'에서는 현대의 인신매매, 일본군성노예제(위안부), 미군기지, 유엔 PKO의 성폭력이라는 아시아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세가지의 성폭력을 하나로 연계되는 문제로서 고발했습니다. 이 법정은 90년의 서울에서의 인신매매문제회의에서 제안되었고 어느 주제도 일본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서 도쿄가 개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몇만명의 태국등의 젊은 여성들이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서구의 성산업에 인신매매조직으로 보내져서, 감금, 협박, 폭력 아래서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대의 성노예제의 비참한 실태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나 한국의 미군기지주변의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는 강간이나 강제매춘등 군대에 의한 성폭력, 그리고 평화유지의 이름아래 캄보디아에 들어간 유엔 PKO군이 낳은 대규모적인 매춘산업등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증언은 한국, 필리핀, 재일의 '위안부'출신의 증언과 함께 이들 세종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모두 여성의 인권침해의 첨단인 것임을 강하게 인상시켰습니다.

법정에 앞서서 '성폭력희생자 추도의 밤'이 행해졌고, '위안부'로서 복은 극한의 시베리아로부터 남은 고열의 태평양 섬들까지 연행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여성들, 그리고 번영의 일본에 인신매매당한 후, 죽임을 당하던지, 자살한 여성들에게 아시아 각국의 참가자들은 흰 꽃을 헌정하고 촛불을 손에손에 도쿄의 밤의 변화가를 행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항하여 함께 투쟁하자는 의사표시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법정에서 채택되었던 '도쿄선언'에서 '우리 아시아 여성은 일본에 의한 위안부제

도를 전쟁범죄, 군대성노예제의 행위로 인정하고 이러한 전쟁범죄인을 기소, 처벌할 책임을 일본국가에게 부과한다'라고 했고, 또한 기지매춘을 전후에도 지속되는 군대성노예제로 정의하며 군사기지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선언은 전시, 평화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의 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힘있는 말로 맺고 있습니다.

"말할 용기를 가진 모든 여성을 축복한다
하나 하나가 기적의 생존자이다
모든 증언이 진실의 승리이다
모든 진실은 말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비난이다
그것은 전시의 여성에 대한 범죄이다
평화시의 여성에 대한 전쟁이라는 범죄이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때, 우리는 이들을 지적하며 비난한다
우리는 저항한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7) 베이징세계여성회의에서 군대성노예제를 전쟁범죄로 명기

아시아법정은 95년 유엔세계여성회의(메이징)를 위한 과정이었는데, 세계각지에서 지역 분쟁이 일어나고 구유고의 내전에서는 2만명의 여성이 루완다의 내전에서는 1만5천명의 여성이 강간당하는등,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베이징회의에서는 최대의 초점이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려고 NGO포름에서 세계의 여성들이 검은 옷의 데모를 했습니다. 각국의 여성들이 내건 프라카드에는 유고나 루완다등 현대의 분쟁하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항의와 함께 과거의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제에 대한 항의의 프라카드도 보였습니다.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아시아연대에서 국제적 연대로 여성들의 행동은 확산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의 지구화를 배경으로 베이징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은 '여성의 인권의 중대한 침해가 특히 무력분쟁시에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무력분쟁시의 강간행위는 전쟁범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에 대한 죄이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나 국제기관이 취해야 할 전략으로서 '무력분쟁하의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전시중에 행해진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 특히 조직적 강간, 강제매춘, 성노예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명을 행하고,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에 책임있는 모든 범죄자를 고소하고 피해자여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노예제를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로 간주하고 진상규명, 책임자의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해야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됨으로서 '위안부'문제해결에 있어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에 들어서부터 동아시아의 여성들이 시작했던 '위안부'운동이 지구화되고 겨우 5년만에 여기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8) 아시아여성기금과 '자유주의사관'파에 의한 '위안부'공격

전후 바로 반세기가 되는 95년은 각국에서의 피해자나 지원자에 의한 '위안부'운동의 고양, 아시아여성연대회의등으로 상징되는 아시아여성들의 국경을 넘은 힘의 결집,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제여론의 압력등, 역사의 큰 파도를 다시 되돌려 보려는 움직임이 나왔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정부는 당초 위안부제도에 대한 군, 즉 국가로서의 관여를 부인하고, 구일본군의 자료가 발견되자, 전후보상문제는 2국조약으로 이미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하여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책임으로 정부수뇌가 사죄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요구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되어 95년에 민간으로부터 모금하여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아시아여성기금(국민기금)을 설치하여 넘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책임에 기초한 국가배상을 하지않기 위한 조치이며, 명예와 정의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모든 수단으로 국민기금을 추진하려고 했고, 피해자나 지원단체 안에 분열이나 불신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경제상황에서 일부 피해자는 기금을 받았지만, 돈으로는 빼앗긴 존엄을 회복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한 대만이나 한국정부는 입체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식민지배나 전쟁책임을 부인하려는 우익적 세력이 전후에 연면히 존재해왔고, 90년대가 되자 그러한 일본역사책임을 묻는 것을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고 비난하는 '자유주의사관'파라는 새로운 형태의 우익세력이 생겼습니다. '위안부'운동이 높아지자 위기감을 가진 그들은 전후 50년을 기하여 '위안부'문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라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안부는 강제연행이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한 매춘부다'등, 대학교수나 저널리스트나 인기만화가등이 '위안부'모욕캠페인을 전개하고 역사를 바로 배우지않은 젊은 세대에게 무시못할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현재의 교과서는 '위안부'문제를 기술하는등, 자학책임으로 거기에 대체되는 새 역사교과서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2001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나라를 성범죄국가라고 교과서에 기록하여 세계에서 비웃음을 사고있다. 일본군대의 성범죄는 세계의 군대 안에서 제일 적은데, 일본만이 성범죄를 했다고 편견을 쓰고있다'고 편집인의 한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사관'은 지구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서 세계각국에서 높아지고 있는 소위 역사수정주의나 배타주의나 자기민족중심의 왜곡된 민족주의의 일본적인 형태로, 그들의 '위안부'공격은 식민지, 전쟁책임 부인론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측면은 '반인권' '반여성' '일본고유의 전통존중'이라는 가부장제 긍정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국주의적(一國主義的)인 대응으로는 불충분하며 바로 국제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사상과 행동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상대화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첨예하게 대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은 여성들이며, '위안부문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지 말라'라고, 97년3월 도쿄에서 '여성들의 반론집회'를 개최하든지, 일본각지의 지방의회에서 그들의 삭제요구청원을 저지하는 행동을 취하는등 여성들이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9)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 불처벌을 문제삼다.

쿠마라스와미 유엔'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은 96년 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군'위안부'제도를 군사적 성노예제라고 정의내리고 국제법위반임으로 일본정부에게 법적책임이 있다고 규정했고, '국민기금'은 그것을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드려야 합니다.

쿠마라스와미보고관은 98년 봄 유엔인권위원회에 '전쟁, 무력분쟁하의 여성에 대한 폭력'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그 보고서에 민간여성의 소리를 반영시키려고 97년 가을,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를 도쿄에서 열고, '위안부'문제를 안고있는 아시아제국 뿐만아니라, 구유고나 아프리카 부터도 포함하여 20개국 40명이 참가하여 세계각지의 분쟁시에서의 성폭력의 처참한 실태를 서로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이 왜 지금까지 심판받지 않았는지, 불처벌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었습니다. '위안부'제도나 남경에서의 집단강간등 일본군의 성폭력이 전후 도쿄재판이나 각지의 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군이 증거인멸한 원인도 있지만 증거문서가 제출되어도 거의 제소되지 않았읍니다.

그 이유는, 재판을 했던 서구의 식민지 종주국은 포로등 자국민에 대한 전쟁범죄를 문제로 삼았고, 지배했던 아시아 사람들의 피해에는 무관심이었다는 일종차별, 식민지주의, 그리고 재판관은 남성만으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이해가 없었다는 여성차별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다시금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를 책임추궁하기 위해서 각국의 여성들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위안부'문제에 관여해 온 아시아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마음든든한 국제회의의 성과였습니다.

2. '위안부'운동의 평가와 국제적 공헌

90년대의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아시아여성의 운동의 성과와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 1) 일본의 전쟁책임, 전후배상문제에 여성의 인권의 관점, gender의 관점을 넣은 일,
- 2) 나서서 증언했던 '위안부'의 용기가 방그라데시, 구유고, 루완다등 타국의 내전이나 분쟁에서의 성폭력 피해자가 침묵을 깨도록 격려한 일.
- 3)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라는 관점을 국제적으로 확립하는데 기여한 일.
- 4) 지금까지의 군사재판을 여성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조명할 기운을 만들고 앞으로의 전쟁범죄를 재판하기 위해서 98년에 설립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성폭력을 넣을 국제여론을 만든 일/
- 5) 전쟁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평상시의 일상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반영임을 나타내고, 여성의 인권침해의 핵으로서의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과 투쟁하는 국제여성운동에 공헌한 일.
- 6) 군대가 가지는 폭력성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명백히 하고 폭력장치로서의 군대의 존재 그자체를 문제삼음으로서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대안사회에 대한 희망을 강화한 일.
- 7) 국경을 넘은 연대활동을 통하여 경제의 지구화에 대항하는 21세기의 글로벌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나타낸 일.

3. 행동제안

'위안부'에게 명예와 정의를! 글로벌 캠페인 2000

'위안부'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90년에 일본정부에 보낸 6항목 요구와, 베이징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의 3항목이 목표가 됩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불충분했던 것이 가해자의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없이 피해여성들이 요구하는 명예와 정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97년에 돌아가신 강덕경할머니가 "최고책임자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그린 그림이 피해자의 절실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20세기가 끝나가는 이때, 그 폭력의 가장 아픈 피해자의 유지를 분명히 세우는 일 없이 폭력이 없는 새로운 세기를 마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자를 재판하지 않았던 전쟁재판을 다시 하기위해서 여성의 힘으로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성노예제) 국제재판(법정)]을 20세기 최후의 해인 2000년의 최후의 달인 12월10일의 세계인권의 날 전후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 후에 발족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네트워크(VAWW NET)에도 협력을 제안합니다.

일본군관계, 군사재판관계의 자료를 철저히 재조사하기 위해서는 일본, 아시아만이 아니라 구연합국도 포함하여 세계안에 보존되고 있는 파일을 발굴할 필요가 있기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년8개월의 기간 안에 세계각국의 여성들이 협력하여 '위안부'제도에 책임이 있는 일본군인이나 정부관계자의 구체적인 이름이나 사실관계등의 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국제법학자나 역사학자등 세계의 전문가에게도 협력을 요청하여 재판을 열고, 그것을 역사적 문서로서 남기는 것입니다.

이 '위안부' 국제법정을 메인 이벤트로 하여 2000년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캠페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기록화(documentation)운동 - 각국의 피해자 증언을 모아서 국제적인 구술사(口述史 oral history)로서 편찬한다(각국어로 번역)
2. 편지캠페인 할머니나 로라들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각국에서 모집하여 출판한다.
3. '위안부'를 테마로 한 아트 이벤트- 그림, 비디오, 영화, 연극, 무용, 노래, 음악, 시, 문학등의 제작을 각국에서 추진하여 2000년에 어떤 모양으로든 발표하는 장을 만든다.

연락처: 155-0032 東京都 世田谷區代澤3-9-5-203

Fax:813-3412-2765 E-mail yayori@jca,ax,apc.org

COMFORT WOMEN IN INDONESIA : UNFINISHED ISSUE

PAULUS R. MAHULETTE, S.H.
Indonesia

A. The Last Situations of Comfort Women Issues in Indonesia

In this honorable forum I will not speak about comfort women, that we are all have been awared. I just want to explain the consequences of Japanese soldier's behaviors, who treated Indonesian women badly in past and it's effects now.

Nowadays in their elderly (most of them are in their middle sixties), they have been isolated by people around them and have suffered. We saw them ourselves when we met them to collect datas. Should we just forget and ignore their suffering? Who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y of their suffering?

Advocacy for comfort women in Indonesia has just begun in 1993, but until now there is no significant improvement.

For the comfort women, efforts that have been done were :

- 1). Collecting datas about number of victims, location, kind of treatment etc.
- 2). Distributing questionnaires.
- 3). Depth interview with some of them.

Advocacy round comfort women has stimulated international world to pay attention to this issue. In 1995, finally Murayama's cabinet issued a policy to form AWF in order to help the comfort women.

The AWF formation was being criticized because Japanese government are accused of "washing hands". There is an evidence of AWF rejection that 1 billion yen had to be collected, but only 419 million has been collected.

The interesting fact is that AWF programs not only direct official apology from Japanese government and gift of 2 million yen to each comfort woman. AWF has 2 other programs : social welfare project for the women's victims

of mass rape and sexual slavery by Japanese imperial army during World War II. The other one is project of women's dignity improvement in Asia.

The fund for the 1st AWF program is gained from Japanese people, and fund resources for the rest programs are from Japanese government's budget. These programs could be given to each country with comfort women otherwise their government allow the Japanese Government dropping the money.

Unfortunately, the situations of comfort women's issues in Indonesia are becoming worse. The government of Indonesi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has signed an MOU at March 26, 1997. In the MOU the government of Japan will give 380 million yen in ten years to our country, and the money was meant to be redress for the world war II victims. However, the money was not belong to ex comfort women's victims.

The fact is we knew that the money come from AWF and the government of Japan didn't tell us that the money would be given to the ex comfort women victims. On the contrary, strangely our government said that the money was a kind of compensation for the comfort women's victims. Our government said that the signing of the MOU meant the comfort woman's issue was about to closed. Than our government make a decision that they would give the money to the nursing home were the ex comfort women's victims could stay there freely.

The situation that I would like to tell is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has not given the redress yet for the comfort women's victims in Indonesia. We believe until now no apology let alone the redress from the government of Japan.

We are strongly regret, since only AWF who has responsibility to handle and overcome the comfort women issue, ranging from apology to giving the redress for the comfort women victims. Where is the government of Japan who has to be responsible for that?

B. Further efforts for the Comfort women's victim advocacy.

After the signing of the MOU, there were 16 NGO in Indonesia (most of them based in Jakarta), who commit to continue to advocate these comfort

women issue. We have plans to seek the redress from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o sue the government of Japan.

The comfort women's cases need to be handle seriously. Because in the light of human right values, the comfort women's cases would be categorized in gross violence of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by their special reporter, Ms. Radhika Coomaraswamy, has conducted an investigation in the victim's country, even in Japan. Her written report was saying that there was a gross violence of human right that have been done by the government of Japan.

We are sure about our plans to seek the redres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because there are law instruments that support the comfort women's victims fight for justice.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 Tokyo Tribunal that strikes the major Japanese war time leaders ruled that they have breath among other's law. Laws and custom of war regarding treatment of prisoners, non combatant and the civilian population. During its deliberations, the Tokyo Tribunals concluded that 1929 Geneva Conventions on Humanitarian Laws were customary International Laws that bound war time Jap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tself has greatly expanded both substantively and procedurally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statue of international tribunal to try serious violation of humanitarian laws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Yugoslavia stated that systematic rape can constitute a crime against humanity is case in point.

Individuals felt guilty abou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s in the Nuremberg and Tokyo trials. In attributing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to individuals, the Nuremberg tribunal observed that 'crimes against international laws are committed by men and not by abstract and it is by punishing individuals that rules of international enforced'.

The sexual enslavement of comfort women took place more than half century ago. However, in this fact there is no bar for them to lodge their suit for compensation. In the 1960 s,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passed the resolution determining that there would be no limitation's period attributing responsibility and in punishing those who have committed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f the comfort woman is seen in the

context of crimes against humanity, than their severe claims for damages against Japan should not be "time barred".

The international concept of state responsibility entails that state of government can be held internationally responsible for th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of its officials. The acts including soldiers even if (according to some cases decided by international tribunals in the pre-World War II era) they acted "outside the scope of their duties."

In fact, the current Japanese government did not "employ" them, who have no defense for shunning responsibility of payment of compensation. The International principal of government succession states that, generall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predecessor government devolve on successor governments.

Jakarta Legal Aids Institute, Yogyakarta Legal Aids Institute and 16 NGOs are going to improve our advocacy for comfort women, by making position paper, beside collecting data, polling and depth interview.

We hope that the participants of this meeting, will support us by writing letters to our government, so they would change their policy in this issue. We also hope your morale supports for the Indonesian comfort women.

With the new Social Ministry, we are optimistic that there will be reformation of this condition even if it needs more time.

제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공동결의문

1998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한국, 일본 5개국의 운동권단체 참석자들은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이라는 주제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국가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명백한 여성인권 침해의 문제이며 국가에 의한 전쟁범죄임을 재삼 확인했다. 이것은 금전적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여전히 전쟁상황중에서 여성에게 가해지고 있는 국가폭력의 극단적인 형태였으며, 세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직적인 성노예였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 세계여성인권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라는 사실을 아시아 여성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수년간 아시아의 '위안부' 피해자의 대부분과 여성, 시민단체들은 일본이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반대하여 왔다. 이에 우리는 내란정부가 1997년 12월에, 그리고 한국정부가 1998년 4월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연대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운동의 성과를 서로 확인했다.

1.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자료의 반출을 통해 50여년간 풀쳐있던 군위안부제가 역사적 사실임을 밝혀냈다.
2. 오랜동안 고난과 치욕의 세월을 보냈던 피해자들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자신감을 자존심을 회복시켰다.
3. 한국과 대만에서는 정부를 움직여 피해자 지원법을 확보하고, 한국은 진범의 입국금지조치를 끌어내는등 중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4. 유엔인권위원회등에서의 국제활동은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라는 관점을 범세계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5.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아시아 각국의 시민단체들은 서로 연대하여 일본정부의 국민기금지급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이러한 그동안의 운동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쟁범죄의 변화, 식민지 청산 문제, 성차별문제, 민족차별문제등, 해결되지 못한 여러문제들이 남아있다는 점에도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제 아시아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공동의 운동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견대하며 다음의 공동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1.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가 결의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2.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운동을 전개한다. 1) 위안부문제와 관련된 범죄자 명단을 발굴한다. 2) 아시아의 피해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일본정범의 출입국 금지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한다. 3)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촉구한다. 4) 2000년대 개척기 제안되었던 '위안부'에 대한 서상헌법법정에 협력한다. 5)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내트워킹을 형성할 것이다.
3.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국가에 의한 개인배상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정부가 국가배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국민기금'의 해산을 요구한다.
4.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과 국가배상실현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한다.

이러같은 결의하에 피해자와 우리 운동단체들은 아시아연대회를 더욱 강화해서 21세기를 미시함에 있어 새로운 결의로 인권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한단계 높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

1998년 4월 17일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참가자 일동